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담당자 : 조웅 심의관
공보관실 : 3480-1368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차한성)에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는 내용의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13. 10. 11. 제정되었음(시행일: 2013. 10. 11.)

▣ 위원회 발족 ⇨ 9명의 위원 위촉 (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 11. 28.(목) 도산분야 학계 및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과 행정부 고위공무원, 금융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 위원 위촉식 후 개최된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관리위원회의 현황과 업무수행 상황을 진단하고, 그 기능 및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

대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하였음

- ◆ 현재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춘천과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도산사건의 전문적 처리는 물론 통일된 실무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비상임 관리위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는 하나, 법원은 상임 관리위원의 증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현행법상 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및 권한의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임 관리위원과 비상임 관리위원의 업무를 재설계함으로써 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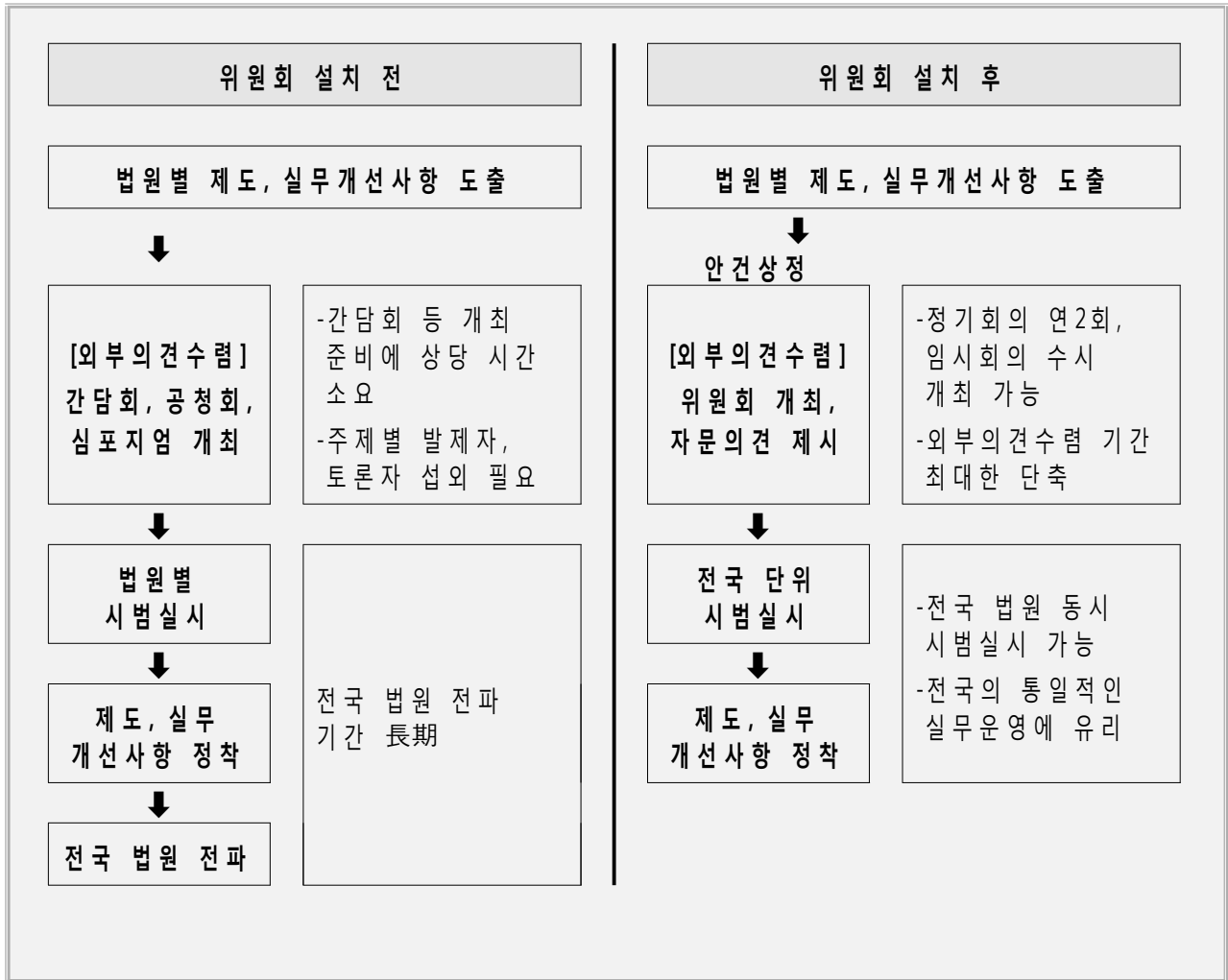
- ▶ 한편, 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과 실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제들을 폭넓게 안건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의 외에 수시 개최가 가능한 임시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위원회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 ▶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도산절차의 중요성은 물론 그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실무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산실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됨
- ◆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을 실질적으로 자문하여 도산절차의 전문성·공정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

임

- ◆ 관리인,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등의 선임·위촉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임
 - ◆ 관리인 등 절차 관계인의 업무수행결과를 평가·관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도산 전문가를 양성·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함은 물론 그 중심에서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좋은 나침반이 될 것임
 - ◆ 도산절차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의 전국적 확대를 시범실시법원이 주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관여한다면 시범실시의 결과 내지 성과 등을 토대로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권고하는 등 법원의 통일적인 실무운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법원별로 논의된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을 곧바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징하면 법원 단위 시범실시가 아닌 전국 단위 시범실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의 신속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 개요도 (다음 페이지)



1. 개요

가. 설치배경

- 통합도산법 제정 및 시행(2006. 4.) 이후 도산사건의 안정적 증가와 세계 경제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도 공정·신속한 처리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이러한 때에 바람직한 도산실무를 성립하고, 도산절차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관여하는 도산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대변하는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도산사건의 전문적 처리는 물론 도산절차 운용실무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

나. 설치근거

-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3. 10. 11. 제정·시행)

다. 위원회 개요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파산위원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함
- 설치근거
 -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13. 10. 11. 제정·시행

■ 업무

- 위원회는 ① 회생·파산절차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② 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③ 관리위원, 관리인 등 후보자 선임 및 위촉 기준과 절차, ④ 관리위원, 관리인 등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 회생·파산절차의 체계적·동일적 운용을 위한 자문의견 제시를 주된 업무로 함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행정기관 공무원, 금융전문가, 학식경험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지명(위원장, 주무위원)함

■ 회의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마다(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마다 개최함

2.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가. 위촉식

■ 일시: 2013. 11. 28.(목) 09:40 ~ 10:10

■ 장소: 대법원 본관 602호 회의실

■ 위촉장 수여: 법원행정처장

■ 위촉 대상자 9명

구분	성명	현 소속	비고
----	----	------	----

구분	성명	현 소속	비고
법관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주무위원 지명
변호사	이영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학교수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지명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공무원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금융전문가	김윤태	산업은행 부행장	
학식경험자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 정기회의

■ 일 시 : 2013. 11. 28.(목) 10:20 ~ 11:50

■ 장 소 : 대법원 본관 1601호 회의실

■ 참 석 자 : 11명

● 위원장, 위원 (9명)

● 간사, 서기 (2명)

■ 안 건

● 간사·서기 지명

- 회생·파산위원회 구성 경과 보고
- 위원회 운영세칙(안) 의결
- 관리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선진화 방안, 관리위원회의 인적 역량 확보 방안 자문

■ 논의결과

- 관리위원회의 현황과 업무수행 상황을 진단하고, 그 기능 및 역할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음

- ◆ 현재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춘천과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도산사건의 전문적 처리는 물론 통일된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 ◆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미상임 관리위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는 하나, 법원은 상임 관리위원의 증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현행법상 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및 권한의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임 관리위원과 미상임 관리위원의 업무를 재설계함으로써 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과 실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제들을 폭넓게 안건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의 외에 수시 개최가 가능한 임시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3. 위원 상세 명단

구분	성명	현 소속	학력 및 약력
법 원	이 종 석	李 悰 錫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2012~現)	연수원 15기, 서울대 법학과 2001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경 춘	李 炘 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2012~現)	연수원 16기, 전남대 법학과 200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2005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 호 사	이 영 구	李 榮 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수원 13기, 서울대 법학과 2006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2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임 치 용	林 治 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연수원 14기, 성균관대 법학과 2005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장 2005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회원 2013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대 학 교 수	오 수 근	吳 守 根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現)	서울대 법학과, 법학박사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의장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

구분	성명	현 소속	학력 및 약력
			
	김재형	金 載 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 現)	연수원 18기, 서울대 법학과 1995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 1997 서울대 법대 조교수 2001 서울대 법대 부교수
행정 공무원	김순철		
		金 淳 哲 중소기업청 차장	전북대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1984 행정고시 27회 2006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본부 혁신기획팀장 2008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금융 전문가	김윤태		
		金 潤 泰 산업은행 부행장	서강대 경영학과, Univ. of Florida MBA, 국제재무분석사 (CFA) 2009 산업은행 기업금융4실 실장 2011 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부행장 2013 산업은행 투자금융부문장, 부행장 (투자금융, 기업구조조정)
학식 경험자	장경덕		
		張 暲 德 매일경제 논설위원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2007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2008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 위원 201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 위원

4. 기대효과

-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도산절차의 중요성은 물론 그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실무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산실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됨
-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을 실질적으로 자문하여 도산절차의 전문성·공정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
- 관리인,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위원),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등의 선임·위촉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임
- 관리인 등 절차 관계인의 업무수행결과를 평가·관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도산 전문가를 양성·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함은 물론 그 중심에서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좋은 나침반이 될 것임
- 도산절차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의 전국적 확대를 시범실시법원이 주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관여한다면 시범실시의 결과 내지 성과 등을 토대로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권고하는 등 법원의 통일적인 실무운동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법원별로 논의된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을 곧바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징하면 법원 단위 시범실시가 아닌 전국 단위 시범실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 및 실무개선사항의 신속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개요도 (다음 페이지)

